







문 13. 현행 「지방공무원법」상 공무원의 결원 보충방법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신규임용 ㄴ. 승진임용 ㄷ. 전직 ㄹ. 전보 ㅁ. 강임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ㄴ, ㄷ
- ③ ㄱ, ㄴ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 ④ ㄱ, ㄴ, ㄷ, ㄹ, ㅁ

문 14.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감사청구인의 연령 제한은 없다.
- ②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- ④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.

문 15.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모든 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 이내이다.
- ② 특별시의 부단체장 정수는 3명 이내이다.
- ③ 시, 군,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임명한다.
- ④ 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문 16.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한다.
-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.
- ③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, 세외수입(재산매각수입 제외), 지방교부세,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.
-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④

· 지방공무원법 제26조: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·승진임용·강임·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.

14. 정답 없음(기존 정답: ③)

- 지방자치법 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
  - 18세 이상의 주민
  - 시·도: 주무장관에게, 시·군·구: 시·도지사에게
  -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    - \* 2022. 1. 13.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→3년으로 늘어났다.
  -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, 공표하여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(부시장·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
  - 서울특별시: 3명
  - 시·도: 2명[단, 인구 800만 이상의 시·도: 3명(경기도)]

16. ④
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
  -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: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
  -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: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

문 17.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부담금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권
- 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권
- ③ 주민소환투표 청구권
- ④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권

문 18.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충성의 원칙- 중층의 국가공공체 조직의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
- ② 효율성의 원칙 -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
- ③ 현지성의 원칙-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정부에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
- ④ 충분재정의 원칙-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

문 19.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서면 이행명령
- ② 대집행
- ③ 재정 불이익 조치
- ④ 정지권

문 20.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건국 초기부터 1961년 「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」이 시행되기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읍(邑)·면(面)을 기초지방정부로 두고 있었다.
- ②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단층제로 전환되었다.
- ③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「지방자치법」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3층제를 이룰 수 있다.
- ④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계층을 법률에 획일적으로 정함에 따라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①

-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
- 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- 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- 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18. ②

- ② 포괄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. 효율성의 원칙에 따르면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등 사무에 따라서 기초 지방정부보다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9. ④

- 지방자치법 제189조 제1항: ...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.
- 지방자치법 제189조 제2항: ...대집행하거나 행정상·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20. ③

-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: ...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. 즉 자치구가 아니므로 자치계층은 2층제이다.